

“KF-21, 공군의 중추... 자주국방 새 시대 개막”

문 대통령, 국산 첫 전투기 KF-X 시제기 출고식 기념사

“항공산업 발전 역사적 이정표 미래성장 동력 이끌 견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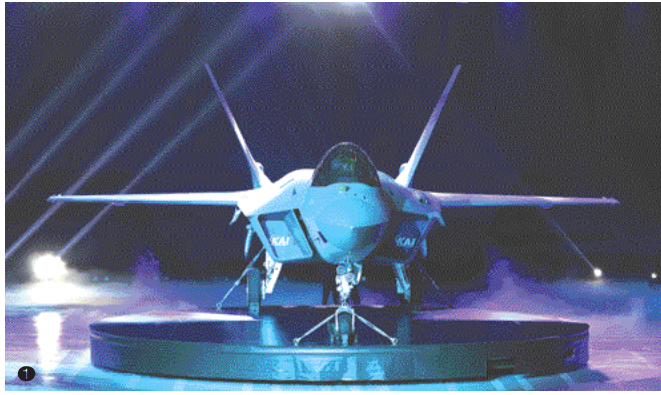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20여년 간 개발 과정 끝에 첫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와 관련해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KF-X 생산공장에서 열린 KF-X 시제 1호기 출고식 기념사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됐다. 세계 여덟 번째 쾌거”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드디어 늘름한 위용을 드러냈다”며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모두 120대를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군 모든 개발진과 참여 기업의 노력, 국민들의 응원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크나큰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할 KF-X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국내 기술진이 주도한 국산 전투기다. 공군의 독자적 전투기 개발 운동·역량 강화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뒤 20여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KF-X는 그동안 전투기 개발 사업명



① 지난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②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인 KF-X로 불리다가 이날 출고식을 기점으로 ‘KF-21 보라매’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됐다. 국내 개발·생산 전투기에 붙이는 K, 전투기를 의미하는 F,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았다.

보라매라는 이름은 공군을 상징하는 맹금류에서 따왔다. 보라매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쓴 매다. KF-X 개발사업이 과거 보라매 사업이라 불리던 별칭의 의미도 함께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KF-21이라는 이름에는 21세기의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킨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국민들은 KF-21에 우리 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를 호칭으로 지어주셨다. KF-21, 보라매는 우리 공군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KF-21의 구체적인 성능과 전투 능력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KF-21은 음속의 1.8배에 달하는 비행속도, 7.7의 무장탑재

량으로 전천후 기동성과 전투능력을 갖췄다”며 “공중 교전은 물론 육로나 해로를 통한 침투세력의 무력화, 원거리 방공망 타격까지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전자전 대응 능력도 뛰어나다. 에 이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로 적기와 미사일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며 “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는 지상의 물체를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고,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등 우리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아무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실전에 투입할 수 있다”며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에이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

용해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와 정찰 임무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무인 항공 전력도 2025년까지 통신중계, 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며 “독자적 정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군집 위성시스템은 우주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독자 개발한 국산 전투기의 경제적 효용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와 방위산업체는 KF-X 자체 개발을 통해 기술파급효과 49조원, 생산유발 효과 24조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조9000억원, 취업유발효과 약 11만 명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KF-21에는 3만 개가 넘는 세부 부품이 들어가고, 국산화율 65% 이상으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700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만

1만2000개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면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고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수출까지 활발히 이뤄진다면 그 효과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KF-21 사업 참여업체들이 축적하게 된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는 항공산업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KF-21 개발·생산에 참여한 20명의 민간 연구소 관계자들의 이름을 직접 일일이 호명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KAI,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연구원들을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KF-21이 만들어진 자신감과 자부심은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스

‘함내세요, 필수노동자’



우범기 정부부지사

우범기 전북도 정부부지사

사가 코로나19 상황 속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맣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전북경영자총협회 김동창 부회장의 지명을 받은 우범기 정부부지사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여러분’이라는 손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리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도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는 필수노동자들에게 존경과 고마움을 표시했다.



오명근 전북도의원

전북도 의회 오명근 의원

원(더불어민주당·전주)이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한 ‘그맣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한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회 최전선에서 맡은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을 지목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목조문화재

207곳 안전점검 시행

전북도가 지난 3월 정읍 내장사 대웅전 방화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된 안타까운 사례를 반문교사로 삼아, 목조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방재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문화재 재난 방지와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4월 중순까지 도내 중요 목조문화재 207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군과 소방서, 문화재 돌봄사업단,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업체,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하며, 국·도·시·군별 예산·인력 등 유지관리, 신발 예방을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별도로, 도는 문화재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회(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겨울철)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사전 교육을 통해 문화재 현장 사고 예방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에 문화재 관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노을대교 건설 예정지인 고창과 부안을 찾았다.

“노을대교 사업 국가계획 반영에 힘 모을 것”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건설 예정지 고창·부안 방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북도당위원장)이 노을대교 건설 예정지인 고창과 부안을 찾았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최영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장 등 주요 인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을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청취하고, 노을대교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대한민국 최장 구간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인 고창군과 부안군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약 7.5km 길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상설된 국도 77호선의 건설도로 기능이 회복되고, 통행 거리가 단축돼 운행비용 등 97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현재 68km에 달하는 통행거리도 7.5km로 짧아져 고창에서 부안까지 70분 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을 10분으로 50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지난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이후, 일부 지역의 반대와 수도권 사업에 유리하게 설계된 예비타당성 평가체제로 인해 매년 경제성 논리에 밀려 17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정운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5년째 노을대교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으며, 국토교통부 도로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직접 건설 예정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을대교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노을대교 건설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도 최대 속원사업이므로 이번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으며, 최영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해상교량안전과장은 “노을대교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사업 계획 확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북도민 모두가 더욱 팔팔 뭉쳐야 한다”며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7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불법·편법·투기 일삼는 ‘가짜 농부’ 근절

민주 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방지법’ 대표발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불법, 편법, 투기를 일삼는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원 경우 또는 자연재해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에 작성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농지 취득 사후에 임의 선정으로 확인하고 있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농지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 등은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지자체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 재배 작물

간에 벼·고구마 등을 기입하고, 실제 재배 해당 농지가 개발시 보상받기에 유리한 용버들 등 묘목을 15~25cm 간격으로 뺏박하게 심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비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농지취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농지취득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한 이용상태를 엄격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도록 하고, 불법과 탈법이 이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재학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추진

민주 신영대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시)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